

기업 데이터 플랫폼 지원 정책 현황과 지원 방향*

김영환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중소·벤처기술혁신정책연구센터 연구위원
younghwankim@stepi.re.kr

데이터 기반 기업 혁신활동의 중요성

디지털전환의 과정에서 데이터는 기업의 성장과 도약을 위한 전략적 자산으로 부각되고 있다.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2022.2.)에 따르면 기업의 디지털전환 과정에서 주로 ①기업의 ICT 도입 양상 및 동향, ②기업의 무형자산에 대한 투자와 스킬에 대한 수요, ③제품의 디지털화 및 빅데이터 분석을 위한 사용자 데이터 활용의 세 가지 경향이 나타난다. 최근에는 기업이 많은 양의 데이터를 수집·활용할 수 있게 하는 고속 광대역, 클라우드 컴퓨팅, BDA, 소셜미디어 및 RFID 등의 첨단 ICT 기술이 도입되고 있다. 또한 기업 ICT의 효과적인 사용을 위해 소프트웨어나 데이터, R&D, 지적재산권 등의 무형자산에 대한 투자가 확대되고 있으며, ICT 및 데이터 관련 효과적인 활용을 위해 과학·기술·공학·수학(STEM) 및 정보통신 관련 전문역량을 보유한 인력의 활용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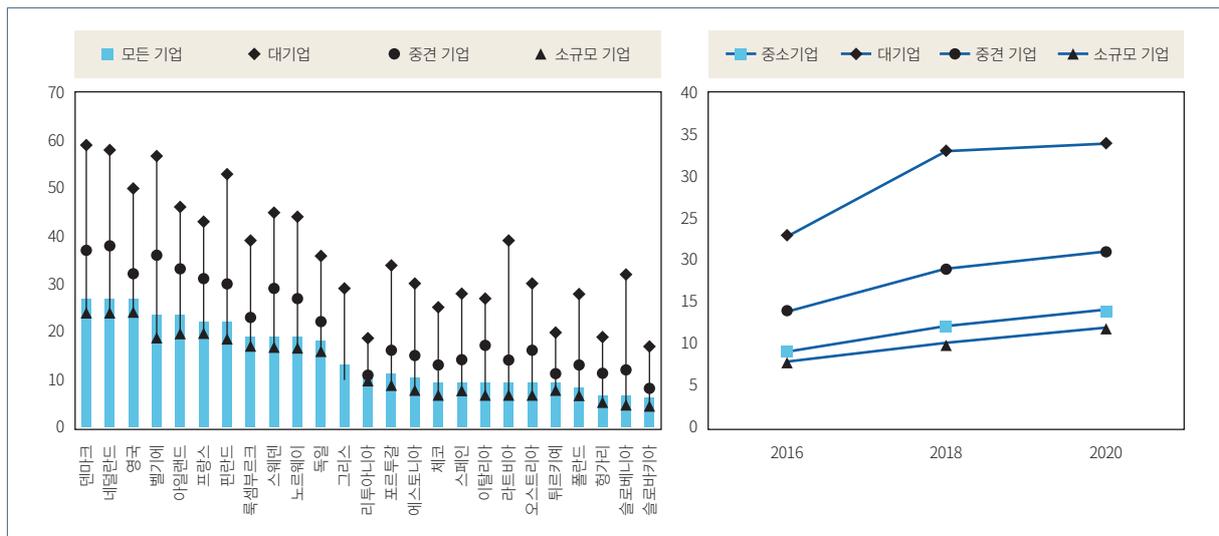
하지만, 산업별로 혹은 기업이 영위하는 사업별로 데이터를 자본화할 수 있는 정도가 각기 다르기 때문에 기업들이 데이터를 전략적 자산으로 활용할 수 있는 수준에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 데이터 활용이 가장 수월한 분야는 운송 및 저장 분야로 중소기업이 운송 과정에서 실시간 데이터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를 새로운 사업모델로 활용하기 용이하지만, 건설 및 호텔 부문은 디지털 성숙도가 낮아 데이터의 전략적 자산이 가장 어렵다. 즉, 모든 산업·기업이

* 본고는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에서 지난 2023년 수행된 정책연구 과제 「데이터 플랫폼 정책 진단과 생태계 구축을 위한 고도화 전략」(정일영 외) 중 '기업 데이터 지원 정책 분석' 내용을 참조해 작성됨

정부의 데이터 관련 지원정책으로부터 동등한 혜택을 누릴 수는 없다(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2023.4). 결국 기술력과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은 데이터 경제 활동의 수행에 애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더 많은 양의 데이터를 생성·활용할 수 있는 기업이 더 큰 부가가치를 누릴 수 있는 시장 논리상 중소기업은 규모가 큰 대기업에 비해 열악한 위치에 있다. 특히 중소기업의 데이터 경제 활동에 있어 가장 큰 애로는 데이터 및 기술에 대한 접근 제한이다. 중소기업의 데이터 접근 및 활용을 위한 자금조달 방법의 부족과 까다로운 규제 요건으로 인해 이러한 애로는 더욱 심화되는 경향을 보인다.

물론 코로나19를 계기로 디지털전환을 추진하면서 70% 이상의 기업들이 과거에 비해 디지털 기술을 더 많이 활용하고 있다. 다만 디지털전환의 초기 단계인 디지털 플랫폼(전자상거래 사이트, 소셜 네트워크 활용 등) 또는 외부 자문(사이버 보안 지원 등)을 활용하는데 그치는 수준이며, 데이터 분석 등의 정교한 기술이나 생산 프로세스 통합관리, ERP 활용 등 대량화 작업이 필요한 분야에서는 여전히 대기업과의 역량 차이가 뚜렷하다.

[그림 1] 기업 규모에 따른 빅데이터 분석 수행 비율(2020년 기준)



자료 : OECD(2022), 『Financing Growth and Turning Data into Business』;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2023.4.), 『중소기업의 효과적 성장지원책: OECD회원국 데이터거버넌스 정책 사례』 재인용

국내 주요 기업 데이터 지원 정책 프로그램

데이터 기반 기업 혁신활동의 중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국내에서는 정부 부처별로 기업 데이터 활용을 지원하는 다양한 정책 사업들을 기획·운영하고 있다. 특히 정보화 관련 정책을 주도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는 문재인 정부 시절 핵심 정책인 디지털 뉴딜의 일환으로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과 같은 데이터 댐 사업과 함께 데이터 기반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데이터바우처 사업 등을 추진해 왔다.

한편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주로 제조 분야의 중소·벤처기업들의 빅데이터·AI 등의 디지털 기술 활용을 촉진하는 정보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산업부에서는 핵심 전략산업의 밸류체인 상의 기업 간 협력을 통한 산업 지능화를 선도하기 위한 R&D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표 1] 정부 부처별 주요 기업 데이터 지원 정책 사업 현황(2023년 기준)

부처	세부사업명	내역사업/주요내용	예산(백만 원)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데이터기반산업경쟁력강화	데이터바우처, 데이터 플래그십, 중소기업 데이터 분석 활용 지원(2023년 사업폐지)	106,335
	인공지능학습용데이터구축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	280,500
중소 벤처기업부	데이터인프라구축 (정보화)	KAMP(AI 중소벤처 제조 플랫폼) 포털 운영, 제조데이터 유통·거래 촉진(가공·구매 지원)	8,500
	빅데이터 기반 서비스개발 지원사업 (R&D)	빅데이터 활용 비즈니스모델의 서비스개발 지원(2023년 사업폐지)	5,798
산업통상 자원부	산업지능화선도밸류체인육성사업 (R&D)	산업 밸류체인에 빅데이터·AI 등 디지털 기술 접목 (밸류체인 선도 R&D, 산업지능화 협업지원센터 구축)	9,820
	DX한걸음프로젝트 (R&D)	산업데이터·AI 활용 공통과제 해결형 R&D	4,875
	클라우드기반디지털엔지니어링 통합빅데이터 구축 (R&D)	엔지니어링 빅데이터 플랫폼, 데이터 수집·변환 및 분석, 엔지니어링 SW 클라우드 활용 지원	7,800
	IoT가전빅데이터활용지원 (정보화)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운영, 빅데이터 분석활용·지원, IoT가전수출 및 재직자 역량강화, 플랫폼 보급·확산	1,962
보건복지부	의료데이터 보호활용 기술개발 (R&D)	보건의료 빅데이터 활용기반 연구, 블록체인 활용 의료데이터 관리체계 및 역동적 동의체계 연구 등	3,400
농림축산 식품부	데이터 기반 스마트농업 확산 지원	스마트농업 서비스 솔루션 지원	6,235

자료 : 각 부처별 2022년, 2023년 예산 및 기금운용 계획

기업 데이터 플랫폼 지원정책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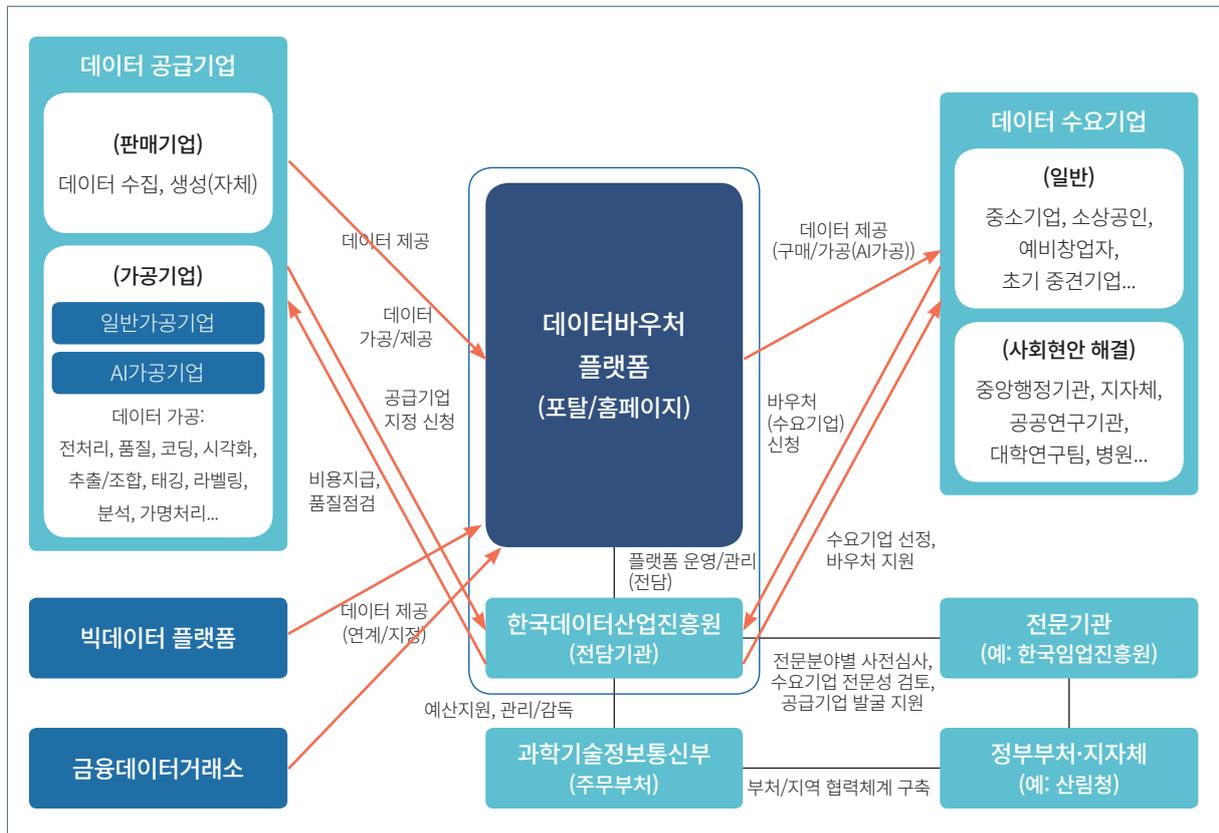
사례 ①: 데이터바우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

데이터바우처는 데이터 구매 및 가공 바우처 지원을 통해 데이터 수요 및 공급 생태계를 조성하고 전 산업의 디지털 기반 데이터 활용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 시작됐다. 2023년 예산 규모는 894억 원(데이터 구매 바우처 760건, 일반 데이터 가공 바우처 250건, AI 가공 바우처 1,000건 지원 예정)이며, 기업이 참여하는 일반 분야와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 공공 및 연구기관, 대학연구팀 또는 병원 등이 참여할 수 있는 사회현안 해결분야로 나누어 지원한다. 2022년 기준, 1,369개의 공급기업을 통해 2,680개의 수요기업에

기업 비즈니스 모델 및 사업 확장에 도움이 되는 데이터를 공급·활용하는데 기여했다.

데이터바우처 사업의 전담기관은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K-DATA)으로 사업 추진계획을 이행·관리하고 전체 사업을 주관한다. 데이터바우처 사업은 2019년 시작 이후 2022년까지 9,000여 개에 달하는 기업들을 지원해 온 국내의 대표적인 기업 간 거래 중심의 공공 데이터 플랫폼이다. 최근의 데이터바우처 사업은 초기 데이터 공급 및 거래 활성화에서 데이터를 기업이 필요로 하는 수요에 맞게 가공(특히 시를 통한 가공)하는데 정책 지원의 초점을 변화시키고 있다. 더불어 데이터의 거래를 체계적으로 돕는 거래소 개념으로 변모해, 다양한 거래 방식과 품질에 대한 관리 및 분쟁 조정 등의 지원 기능을 강화하는 중이다. 다만, 사업예산의 감소에 따라 향후 데이터바우처 지원은 뿌려주기식보다 지역, 청년기업 등 열위기업에 대한 선별적 지원에 집중하고, 우수 데이터 거래활용 사례를 문제해결은행 방식으로 제공하는 등의 변화를 추구하고자 한다.

[그림 2] 데이터바우처 플랫폼 생태계 관계도



자료 : 데이터바우처 홈페이지(<https://kdata.or.kr/datavoucher/index.do>) 등을 참고해 작성

사례 ②: 인공지능학습용데이터구축(과학기술정보통신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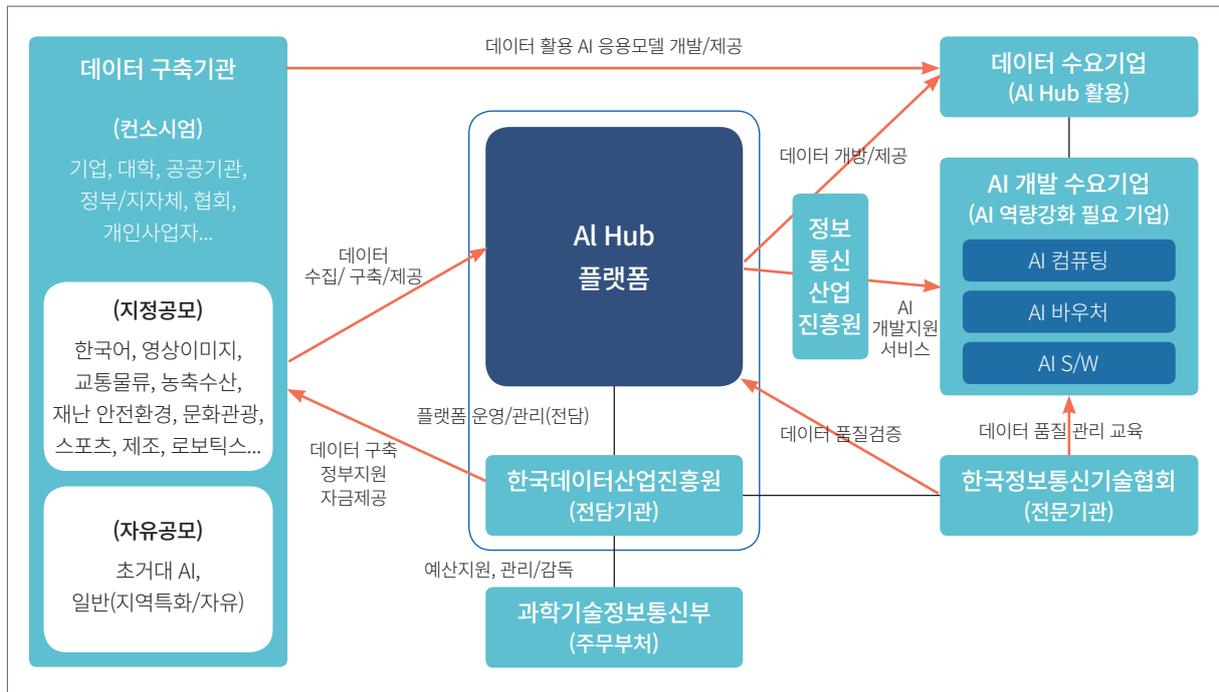
인공지능학습용데이터구축 사업은 ‘디지털 뉴딜’ 프로젝트인 ‘데이터 댐’의 대표사업으로 인공지능 서비스 개발에 필수적인 학습용 데이터를 대규모로 구축·개발하고자 추진됐다. 2017부터 2019년까지 21종을

시작으로, 2020년 170종, 2021년 190종, 2022년 310종의 인공지능학습용데이터를 구축했으며,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 결과는 기업의 활용을 위해 ‘AI Hub’에 공개되고 있다(2024.3.25. 기준, AI Hub에서 총 702건의 인공지능학습용 데이터셋 공개). 구축 분야는 기반기술분야 및 전략분야로 구분되며, 지원 방식은 지정공모와 자유공모로 구분된다.

인공지능학습용데이터구축 사업의 전담기관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으로 세부계획 수립 및 수행기관 선정, 사업성과 관리 등 전체 사업을 주관한다. 더불어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및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는 NIA와 함께 AI Hub를 중심으로 한 플랫폼 생태계 내 지원역할을 담당한다. 구체적으로 NIPA는 AI 개발 수요기업들에 대한 AI 컴퓨팅, AI 바우처, AI 소프트웨어 등의 개발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며, TTA는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의 다양성, 품질, 유효성 검증과 함께 데이터 품질관리, 검증 교육을 실시한다.

인공지능학습용데이터구축 사업을 통한 수요기업의 성과는 AI 서비스 개발 및 고도화, 지식재산권 획득, 매출 실현 등의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최근 초거대 AI 경쟁력 강화 방안에 맞추어 사전학습된 인공지능 모델의 가중치를 새로운 데이터에 맞게 파인튜닝하는 데이터셋 만들기에 집중하고 있다.

[그림 3] 인공지능학습용데이터구축 플랫폼 생태계 관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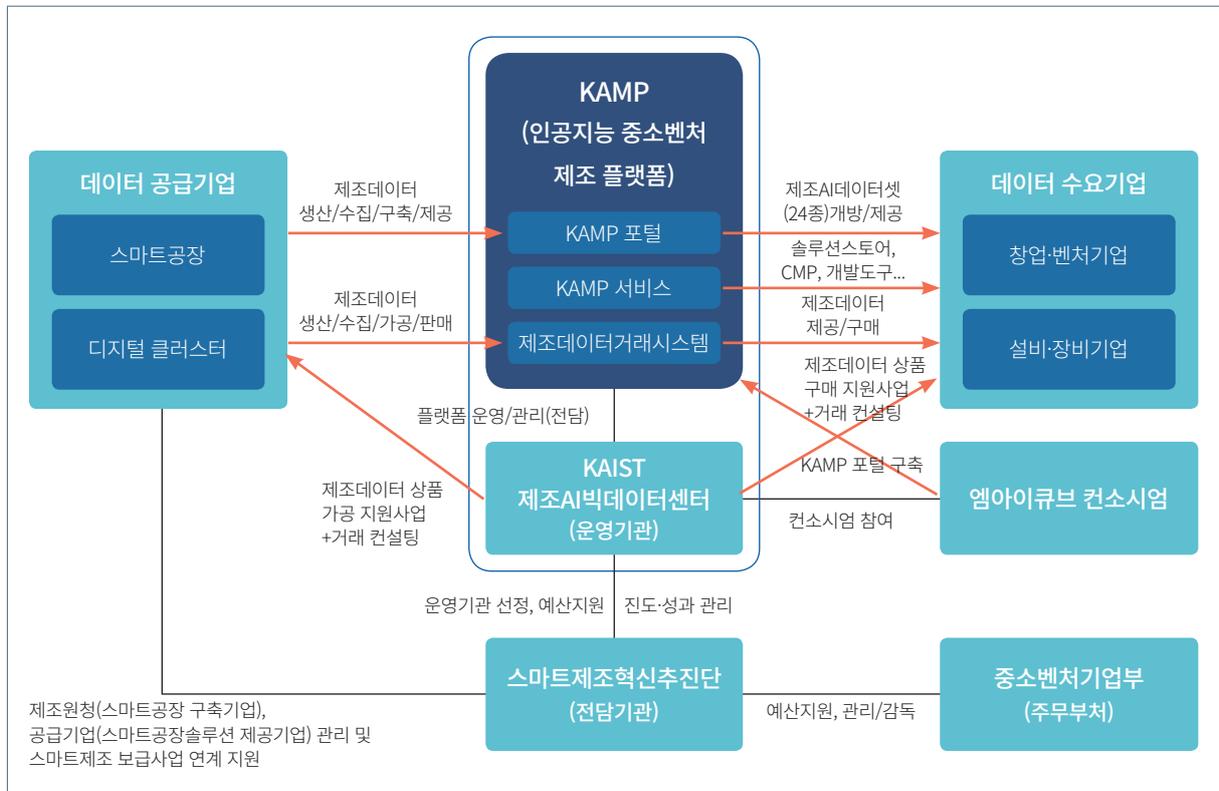
자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2023.4.) 등을 참고해 연구진 작성

사례 ③: 데이터인프라구축(중소벤처기업부)

데이터인프라구축 사업은 중소 제조기업의 데이터 및 인공지능 활용 촉진을 위한 민간 클라우드 기반 제조분야 디지털전환 종합 플랫폼(DTaaS) 구현 사업이다. 특히 KAMP(Korea AI Manufacturing Platform)는 중소 제조기업이 갖추기 어려운 데이터 수집·저장·분석 인프라와 AI 전문가, 실증 서비스 등을 한곳에 모은 제조시에 특화된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한다. 즉, 데이터인프라 구축 사업은 KAMP에 필요한 시스템·인프라 구축, 제조데이터 유통거래의 촉진 등을 위한 다양한 세부 사업으로 구성되며, 제조데이터 상품 가공 및 구매, 컨설팅 등에 필요한 지원사업을 운영한다. 현재 KAMP에서는 50개에 달하는 제조시 데이터셋을 제공하고 있다.

데이터인프라구축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을 전담기관으로 지정해 사업의 기획·관리·예산 조정 기능 등을 부여하나, 실제 데이터인프라구축 사업의 실무를 맡는 것은 KAMP 플랫폼 구축·운영기관인 KAIST 제조시빅데이터센터이다. KAMP는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보다는 제조 스마트화를 표방하면서 만들어졌으나, 제조데이터 활용에 있어 시가 강조되면서 데이터 플랫폼 사업으로서 고도화되고 있다. 더불어 제조 기업이 제조데이터를 어떻게 수집하고 활용해야 하는지 알려주는 참조표준을 보여주고, 데이터 기반 제조혁신에 대한 중소기업 인식을 개선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그림 4] 데이터인프라구축 플랫폼 생태계 관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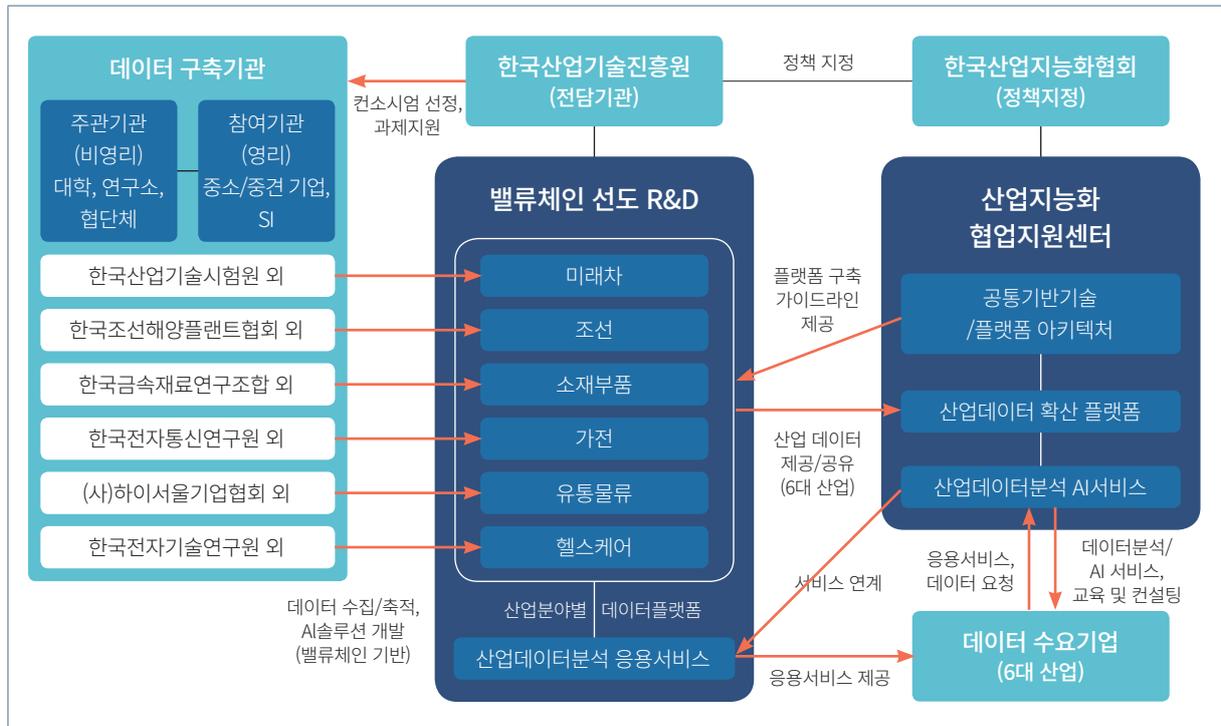
자료 : 중소기업부(2023.1.), 「데이터 인프라 구축사업 운영기관 모집 공고」 등을 참고해 연구진 작성

사례 ④: 산업지능화선도밸류체인육성사업(산업통상자원부)

산업지능화선도밸류체인육성사업은 주력산업에 DNA(Data, Network, AI) 등 디지털 기술을 적용해 글로벌 밸류체인에 신속·유연하게 대응하고, 융복합 및 지능형 제품, 제조 서비스 등 산업 포트폴리오 확장 및 고부가가치화를 달성하고자 2021년부터 추진되는 사업이다. 본 사업은 업종 간·내 문제해결형 협업 컨소시엄을 구성해 공동 R&D를 지원하는 ‘밸류체인 선도R&D’와 컨소시엄 연계를 위한 ‘산업지능화 협업지원센터 구축’으로 구성된다.

먼저 밸류체인 선도R&D는 밸류체인 상의 유사문제에 직면한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데이터·AI 기반 공통문제 해결을 위한 R&D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미래차, 가전, 헬스케어, 유통·물류, 조선, 소재·부품의 6대 전략분야를 선정해, 2021부터 2023년까지 3년 동안 ‘기반구축’(데이터 공유 플랫폼 개발), ‘데이터 수집·축적’, ‘데이터 분석·활용 및 솔루션 개발’의 단계별 수행 절차를 거치도록 설계됐다. 한편 산업지능화 협업지원센터는 밸류체인 선도R&D 수행 컨소시엄이 공통으로 활용 가능한 기술을 보급함과 동시에 밸류체인 기업 간 협업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다. 산업지능화선도밸류체인육성사업의 전담기관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로 밸류체인 선도R&D사업의 지원대상 과제 및 사업자 선정·평가·사업비 정산·기술료 징수·성과활용 평가 등 일련의 R&D 프로세스를 주관한다. 반면, 산업지능화 협업지원센터 구축사업의 경우 정책지정 형태로 실질적으로는 한국산업지능화협회(KOIIA)가 ‘iDX협업지원센터’라는 이름으로 설립·운영하고 있다.

[그림 5] 산업지능화선도밸류체인육성사업 플랫폼 생태계 관계도



자료: 산업통상자원부(2023. 1.), 「2023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사업설명자료(산업기반실)」 등을 참고하여 연구진 작성

산업지능화선도밸류체인육성사업은 6대 핵심 산업별로 밸류체인 상의 참여기업들 주도의 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려는 목적으로 추진돼, 업종별 기업·산업의 데이터 기반 혁신 및 디지털전환 지원을 위한 기능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하지만 밸류체인 특성상 컨소시엄에 참여하는 특정 기업들에게만 데이터 구축·활용의 혜택이 돌아갈 수밖에 없는 한계도 존재한다.

기업 데이터 지원 정책 이슈 및 시사점

앞서 살펴본 기업 데이터 플랫폼 지원정책 사례와 플랫폼 운영기관 관계자 대상의 인터뷰 등을 통해 기업 데이터 플랫폼 지원 정책에 관련된 주요 이슈를 ‘확보-유통-활용’의 데이터 가치사슬의 3단계로 구분하고 이에 대한 정책적 시점을 정리하자면 [표 2]와 같다.

먼저 ‘확보’ 단계에서의 핵심 이슈 중 하나는 수요보다는 공급기업 중심의 데이터 확보가 이루어진다는 현실이다. 데이터 플랫폼 구축 초기 단계이다보니 체계적인 수요 발굴보다는 공급자 중심의 데이터 획득에 초점이 맞추어지고, 그렇다보니 공급 중심의 데이터의 수요와의 괴리 문제가 발생한다. 또한 데이터 원청기업에 비해 솔루션 공급 기업에 사업의 수혜가 편중되는 현상도 발생한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수요자의 관점에서 필요 데이터에 대한 상세 수요조사 수행 및 중장기 데이터 로드맵 구축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원청기업과 솔루션 기업 간 협력 R&D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데이터 구축뿐 아니라 활용 및 사업화까지 연계된 협력과제를 지원함으로써 원청기업에 대한 혁신 인센티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장기적으로 솔루션기업이 아닌 데이터 수요기업 주도의 데이터혁신 R&D 지원 프로그램이 설계되어야 한다.

‘확보’ 단계에서의 두 번째 이슈는 플랫폼에서 공개·거래되는 데이터의 질적 수준의 문제이다. 데이터의 품질의 기본은 정확도, 일관성, 빠짐없는 데이터 무결성이지만, 진정으로 좋은 데이터는 수요기업이 원하는 형태의 ‘가성비’가 우수한 데이터일 것이다. 즉, 데이터의 품질이 반드시 무결성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수요기업이 데이터를 통한 생산성 향상과 가치창출을 위해 적당한 비용(가격)을 지불해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인지가 중요하다. 이러한 품질 좋은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먼저 데이터의 객관적인 품질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가 필요하다. 더불어 데이터의 품질 수준에 따른 적정가치 판단을 위한 평가기준 및 검증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더불어 수요자 관점에서 데이터 만족도 및 활용애로 조사를 통해 수요자가 원하는 양식의 데이터 제공 여부, 실제 데이터 활용애로 애로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진단할 필요가 있다.

다음 ‘유통’ 단계에서의 핵심 이슈로는 데이터 거래 촉진 및 조정을 위한 코디네이터/브로커 역할의 부재를 꼽을 수 있다. 기업 간 데이터 거래가 활성화되면 될수록, 데이터의 가격 및 품질을 검증하고, 데이터를 거래할 상대에 대한 신뢰도 높은 정보를 제공할 전문가가 필요하다. 또한 데이터 활용 목적에 따라 각기 다른 데이터 혁신 전략 수립을 위해 전문 중개인(조직)의 역할이 중요하다. 물론 데이터 플랫폼 조성 초기에는 축적된 데이터 공급기업 네트워크나 사전조사를 통한 수요기업의 데이터 수요 파악이 용이한 공공 부문에서의 역할이 중요할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데이터 공급-수요기업 간의 매칭 및 거래 활성화를

위해 민간 부문으로 중개 역할이 이양되면서 공공 부문은 데이터 구축 표준 및 가이드라인 제공 등 거래 활성화를 위한 규약 마련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정부에서는 민간 데이터거래사(브로커/기업) 육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데이터산업(진흥)법상 명시된 데이터거래사(업자) 양성 지원을 위한 전문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해, 수요 발굴, 시장조사 및 분석, 데이터 처리, 가치평가, 데이터 혁신 관련 컨설팅, 법·제도 자문 역량 등을 교육한다. 한편 산업 및 기업의 디지털화를 위한 공공 혁신지원 거점 구축 노력도 필요하다. 거점에서는 데이터 거래에 대한 표준 프로세스 및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데이터 혁신 인식이 낮은 지방에서는 특히 지역기업의 데이터 활용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별 데이터혁신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유통’ 단계에서의 또 다른 주요 이슈는 데이터 거래 관련 분쟁 대응 등의 제도가 미비하다는 것이다. 데이터 구축에만 초점을 맞춘 데이터 플랫폼 지원정책의 초기 방향성 때문에 데이터 거래가 어느 정도 활성화된 현재, 다양한 데이터 거래에서 발생하는 분쟁 조정 역량이나 조직이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공급기업의 원시데이터 확보 과정에서의 개인정보, 영업비밀, 저작권 등의 문제 소지가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개인정보 중 비정형데이터의 비식별처리 등에 대해서 관련 기준이 부재한 것이 큰 문제이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개인정보, 영업비밀, 저작권 등 데이터 관련 분쟁 이슈별로 서로 다른 법·제도 적용의 문제를 해소하고 데이터산업법의 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의 역할을 정립하는 등 데이터 분쟁조정 관련 법·제도 체계를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 또한 데이터 플랫폼 운영 초기 데이터 확보에 초점을 맞춘 플랫폼 운영예산을 데이터 거래 및 활용을 위한 전담인력 및 기능 지원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특히 향후 발생할 기업 간 데이터 거래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데이터 가치평가, 품질관리, 분쟁조정 등의 분야에서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데이터 거래 표준 계약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과 함께, 데이터 분쟁의 소지를 낮추기 위해 데이터 거래 및 활용에서 회피 전략을 수립하는 등의 컨설팅 지원이 필요하다.

한편 ‘활용’ 단계에서의 핵심 이슈 중 하나는 데이터 활용성과 모니터링 및 연계·후속지원 부족이다. 현재 운영 중인 대부분의 공공 데이터 플랫폼은 데이터 거래·제공 이후의 활용 성과에 대한 장기적인 모니터링 체계가 부재하다. 특히 무료 공공데이터 포털의 특성상 개인정보 보호 목적으로 데이터 다운로드 시 활용 목적조차 파악하지 않는 실정이다. 또한 데이터 구축에 비해 기업의 데이터 활용 등에 대한 연계·후속 지원 프로그램은 예산 등의 한계로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데이터 플랫폼 지원 정책을 초기 데이터 확보에서 데이터의 질을 높이는 질적 성장으로 전환해 이미 구축된 데이터의 활용 관련 지원활동에 예산을 집중 투입해야 한다. 그리고 데이터 활용성과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해, 단순히 데이터 만족도 뿐 아니라 데이터 거래·활용 과정에서의 애로를 파악하고 데이터를 통한 혁신성과를 측정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현재 운영 중인 여러 공공 데이터 플랫폼이 보유한 핵심기능을 바탕으로 플랫폼 간 연계 지원 서비스를 강화해 데이터의 공급뿐 아니라 기업 활용을 위한 통합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활용’ 단계에서 또 하나 중요한 이슈는 데이터 혁신 관련한 낮은 기업 인식 및 우수사례의 부재이다. 데이터는 기업에게는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혁신의 수단이다. 따라서 무엇보다도 기업이 데이터 기반 혁신활동을 통해 매출 및 부가가치를 창출함으로써 수익을 거둘 수 있다는 인식이 중요하다. 이러한 인식의 확산을 위해서는 동일한 문제를 겪고 있는 기업들이 데이터 기반 혁신 솔루션을 공통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플랫폼 구축과 함께, 참조모델로서의 데이터 혁신 우수 사례의 전파 및 확산 노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에서는 문제해결은행과 같은 데이터 혁신의 문제기반 표준 솔루션과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AI 기반 혁신수요 매칭, 혁신활동 성과예측 등의 전문화된 서비스를 기획할 필요가 있다. 또한 데이터 혁신 관련 현장 중심의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데이터 혁신기업 간 교류 활성화 목적의 네트워크 구축에 필요한 간접적인 지원에 집중해야 한다. 특정 기술·산업 분야, 지역·클러스터 중심의 기업 간 데이터 혁신 커뮤니티 및 리더보드 등 온라인 네트워킹 스페이스를 구축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표 2] 기업 지원 데이터 플랫폼 관련 이슈 및 정책 제언

핵심 이슈	정책 제언 (방향성)
1. 수요보다는 공급기업 중심의 데이터 확보 문제	(1-1) 데이터 상세 수요조사 수행 및 중장기 데이터 로드맵 구축
	(1-2) 원청기업-솔루션기업 간 협력과제 지원 및 인센티브 제공
	(1-3) 데이터 수요기업 주도의 데이터 혁신 R&D 지원
2. 플랫폼에서 공개-거래되는 데이터의 질 문제	(2-1) 데이터 품질지표 수립 및 검증지원
	(2-2) 수요자 관점의 데이터 만족도 및 활용애로 조사
	(2-3) 데이터 적정 가치 판단을 위한 평가기준 및 검증지원
3. 데이터 거래 촉진·조정을 위한 브로커/코디네이터 부재	(3-1) 민간 데이터거래사(브로커)(기업) 육성(교육) 지원
	(3-2) 민간주도의 데이터 거래·활용 생태계 구축 및 R&D 지원
	(3-3) 산업·기업 디지털화를 위한 공공 혁신지원 거점 구축
4. 데이터 거래 관련 분쟁 대응 등 제도 미비	(4-1) 데이터 분쟁조정 관련 법·제도 체계 정비
	(4-2) 데이터 분쟁조정·해소 전담인력 및 조직 구축
	(4-3) 데이터 거래 표준 계약 가이드라인 및 컨설팅 지원
5. 데이터 활용성과 모니터링 및 연계·후속지원 부족	(5-1) 데이터 분석·활용(교육·컨설팅, 사업화지원) 예산투입 증대
	(5-2) 데이터 활용성과 모니터링 체계 구축(실태조사)
	(5-3) 데이터 플랫폼 간 연계 지원 서비스 강화
6. 데이터 혁신 관련 낮은 기업 인식수준 및 우수사례 부재	(6-1) 데이터 혁신 문제기반 표준 솔루션 및 가이드라인 제공
	(6-2) 데이터 혁신 관련 현장 중심의 교육 프로그램 제공
	(6-3) 데이터 혁신기업 간 교류 활성화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